

### 새민주,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 검찰 비판

# “檢, 전직 대통령 욕보이지 말라”

새로운미래에서 당명을 변경한 새미래민주당(새민주)이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비판했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당대표와 당최고위원등 20여명은 10일 전주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의 제2 눈 두릅지기 기획(수사)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3년이 다가는 시점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망신주기용, 논두렁 시계와 같은 어거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청탁 취업을 했다고 하는 사위와 헤어지지 2년이 넘는 시점에 별거 상태의, 이혼상태의 다혜씨 집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수사에 도움이 되겠냐”며 “그것 자체가 문재인(전)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한 망신용 수사가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다혜씨의 제주도 별장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제주도에 있는 별장은 호화 별장 아니라 일반적인 제주도 단독 주거 지역”이라며 “이런 내용을 빼버리고 마치 문재인 대통령 일가가 호화 별장을 제주도에 가지고 있는 것이냐고 속이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했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전 대표는 “나는 이상직 전 의원을



전병헌(가운데) 새미래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10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한 극악무도 보복정치 규탄'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전병헌 대표 “망신주기 위한 망신용 수사” 반문 다혜씨 관련 “제주도 별장, 일반적인 단독 주거지역” 이상직 전 국회의원 관련 “증진공 이사장을 하는 것 문 정부 등장에 공헌한 것에 비해 너무 적은 보상”

알고 있다”며 “이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전국직능위원장을 맡아서 직능단체와 중소기업,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선거운동과 지지 작업을 벌였던 성실

한 일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선 캠프가 꾸러진 뒤에는 여전히 전국 직능위원장을 맡아서 많은 활약과 문재인 정부 등장에 커다란 공헌을 한 사람이기도 하다”며

“오히려 증진공 이사장이라는 자리가 하찮게 생각할 정도로 주변에서는 이 전 의원이 증진공 이사장을 하는 것은 기여한 것에 비해 너무 적은 보상”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자리를 두고 마치 대통령과 참모가 거래를 한 것처럼 취급 자리를 놓고 청탁을 한 것처럼 이렇게 왜곡하고 과장하고 모함하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며 “더 이상 전직 대통령을 욕보이지 말라. 더 이상 검찰은 표적수사, 정치 보복 수사를 멈출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뉴스

# “한인비즈니스 대회 성패 여부, 도내 기업 수출계약 실적”

## 박용근 도의원, 긴급현안질문 통해 “도내 기업에 활력 불어넣는 계기 만들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10일 열린 제413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개최가 우려된다며 김관영 지사를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문에 나섰다.

한인비즈니스대회는 새만금개발과 아태마스터스대회라는 대규모 국제행사의 연이은 실패 이후 치러지는 메가 이벤트다. 따라서 전북특자도 입장에서 이는 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개최를 통해서 도민들의 실망과 열패감을 회복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행사 개최를 불과 한 달여 남겨둔 지금까지 크고 작은 문제점을 드러내며 제2의 캄버라 되는 것 아



나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인비즈니스대회가 도내 기업들이 수출 발판을 마련하고 영역을 넓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도내 기업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중요한데도 전북자치도의 ‘깜깜이’ 행사 준비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도내 기업들이 전북자치도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 “심지어는 코트라

전북지원단과 증진공 전북지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조차 도에서 무엇을 하는지 정보가 아예 없다고 한다”라면서, “이렇게 준비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기존 국내 개최 사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지방비 부담 규모가 큰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한인비즈니스대회의 지방비 부담 규모는 총 24억1,500만원(도비 15.15억, 전주시비 9억)으로, 2018년 유치도시인 인천시 5억, 2019년 여주시 6억2,000, 그리고 2022년 울산시 9억과 비교하면 많게는 약 다섯 배에서 적게는 두 배 이상의 지방비가 투입된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유치신청 단

계에서는 지방비 부담 규모가 12억으로 잡혀 있지만 최종적으로 두 배 이상이 늘어나 24억원을 상회하는 규모가 됐다”라면서, “민약 이게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축소해서 나중에 증액시킨 것이라면 도민을 기망하는 행위일 수 있다”라고 질타하면서 성과 없이 지방비만 축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패는 도내 수출기업의 수출계약 건수와 액수로 판가름 날 것”이라며, “이렇게 유치한 이번 한인비즈니스대회가 위기의 도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 지역에 실효성 있는 특례 발굴

## 민주 윤준병 의원,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0일, 농촌소멸·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고, 실효성 있는 특례를 발굴하는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하여 △미활용 폐교재산의 지자체 무상 양여, △농어촌유학 육성·지원계획 수립 및 학구조정 유연성 부여, △외국인유학생 입학승행 운영기관에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능대학 등 우선 선정 및 지원,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시 용적률·건폐율 120% 이내 범위에서 완화 적용, △인구감소지역 이전 초기 증경기업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등의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소규모 민집 철거 시 불필요한 비용·절차를 제거해 건축물 해체 절차를 간소화했고,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인구감소 지역 내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규모 및 시설 기준과 투숙객을 대상으로 한 식사 제공에 대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 및 지속가능한 수도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의 운영·관리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만호 기자·정음=김대환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 “저출생 대응 사각지대 소상공 등 위한 대책 시급”

#### 김슬지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제41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업인에 특화된 출산 및 육아휴직수당 지원 등 전북형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슬지 의원은 “최근 부영그룹이 자녀 1명당 1억 원을 지급하는 파격적 정책을 발표했고, 해당 기업의 입사 지원율이 5배 증가하는 등 효과 또한 뛰어난 전국민적 인식을 끌었다”며, “민간 차원에서 좋은 정책이 나온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는 좋은 기업에 들어간 소수를 위한 사례로, 소외된 많은 이들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슬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각종 연구자료 상 신생아 10명 중 9명이 중산층 이상에서 태어나고, 고소득층 가구에서만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출생에 따른 각종 해



택도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산업 구조가 취약한 전북의 경우 이 문제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김슬지 의원은 “전북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의 85%에 달하고, 비임금 근로자의 78%가 자영업자다”라며, “그럼에도 대부분의 저출생 대책이 지방정부 차원의 ‘규모 있고 탄탄한 직장인 지원’ 기조를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과 생활의 균형은 고사하고 휴업조차 쉽지 않은 이들에게 도가 내놓은 저출생 대책이 얼마나 효용성을 가질지 의문”이라며, “도가 ‘사회적 격차·사각지대 해소’의 관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업인에 특화된 출산 및 육아휴직 지원 수당 등의 전북형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최형열 도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방지 관련 법 제정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5)은 10일 제4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각종 사고 방지 및 안전한 문화 확산을 위한 개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최형열 위원장은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총 2,389건으로, 이는 2017년 대비 약 20배가 증가한 수치다”라며, “특히 사고 유형 중 보행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에 달하고, 이에 따라 사망사고 또한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 등에서 승차 인원 제한, 면허 소지 의무화 등의 조치를 마련했으나, 대부분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시책성으로 실효성은 떨어졌다”라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개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

## “유보통합 정책 추진,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 국주영은 도의원, 어린이집 사무 교육청 완전 이관 등 제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10일 진행된 제4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유보통합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바람직한 유보통합 추진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은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분리되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리하는 체계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가 지속되며 두 기관간 지원의 격차 역시 커지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같은 연령의 아동이 어떤 기관을 다니는지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지난 30여년 간 유보통합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었고, 급변 정부들어 유보통합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며 교육부를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 그 과정에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실제 이번 7월 교육부 주재로 열린 ‘유보통합 관련 시도 기초실장 회의’에서 제시된 교육부의 사무 이관 방안



들은 지자체의 어린이집 사무의 일부만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반쪽짜리 유보통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예산 수반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 추진 시 국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많은 예산이 지방비로 전가되고 있어 지자체와 교육청에서는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정부는 유보통합 대상 아동들 0~5세로 명시하고 있지만 정장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영아는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있고, 유보통합 과정 중 가장 예민한 부분인 교사 자격통합을 위한 지원 방안은 뒤로 미뤄둔 상황에서 이에 따른 현장 보육교사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주영은 의원은 △어린이집 사무의 완전한 교육청 이관과, △유보통합에 따라 발생하게 될 예산의 국비 편성, △유보통합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영아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 제시, △보육교사의 통합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적절한 지원 정책 마련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 의정발전 자문위원 위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10일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체육·안전·소방 등 관련 분야 의정발전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된 의정발전자문위원은 예원예술대학교 김도영 교수,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김동현 교수, 김중용 건축사, 예원예술대학교 송미령 교수, 필봉문화회교 양진성 학교장, 한국레저스포츠협동조합 양해성 이사장 등 6명이며, 이론 및 현장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 의정발전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 “전북교육청,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미흡”

### 윤수봉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대비가 미흡해 도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제41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방역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방역물품 관리 실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교육청이 구입한 공기정정기가 작동 소음 문제로 인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상황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수봉 의원은 “방역물품의 보관 상태와 유효기간, 그리고 실제 현장 투입 여부 등 기본적인 관리조차 소홀하다”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학생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의 비판은 지난 팬데믹을 통해 얻은 교훈에도 불구하고, 도 교육청의 재확산 대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 서거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을 향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2학기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확실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다시 팬데믹의 고통을 겪게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수봉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방역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어떤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이 이 문제를 소홀히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윤수봉 의원은 지난 7월 후반 기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도민들에게 “앞으로 2년 동안 도내 학생들과 학교 교육 공동체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만호 기자